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무주·진안,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무주형 기본소득, 정부사업으로

무주군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군비)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무주군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범군민 결의대회.

군,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 박차

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소득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

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의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 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성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8월 말 1인당 40만원씩 2억1,545명 88억여원)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 '지방소멸 대응 새 전환점'



11일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된 가운데, 전춘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 농촌 실현' 기대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다.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진안군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과 함께 최종 대상지에 포함됐다.

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공모 사업 선정은 단순한 사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진안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이렇게 선정되지 못했

지만,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이어 중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담아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 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열정이 뜨거웠다. 사회단체, 유관 기관 등이 함께하는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됐다. 기본 소득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것

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수용성도 확인됐다.

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도 마쳤다.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은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 중인 교통·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전회회복의 기회로 삼아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물론 시스템 구축과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전춘순 진안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원과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도-IX, 스마트 도로행정 구축 본격화

설계·보상·시공까지 지적·공간정보기반 통합 관리
지적중첩도·드론영상 활용 사업지원·보상 오류 예방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IX)와 함께 도로사업의 설계부터 보상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IX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오류와 사업 지연, 오시공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계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설계 초기부터 실제 지적측량 성과를 반영한 지적중첩도를 구축해 설계와 보상, 시공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IX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해져 오시공을 예방하고 보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은 도로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지연과 보상오류 등을 최소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도로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수 IX 전북지역본부장은 "IX의 지적·공간정보 기술력을 활용해 신속한 토지보상과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도, JB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45개사·도내 103개사 참여 1대1 수출상담 진행
재외동포청·KOTRA·경진원협력...글로벌 판로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도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JB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 45개사와 도내 중소기업 103개사가 참여해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1대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들은 현지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 유통망 진출 가능성 등을 파악하며 수출계약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

도경제진흥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북지원단이 공동 주관했다. 바이어는 전북자치도 해외 사무소와 해외 파트너사 네트워크, 재외동포청 경제인 네트워크, KOTRA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발굴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추천 바이어 15개사, 재외동포청 경제인 바이어 15개사, KOTRA 경제인 바이어 15개사 등 총 45개사가 참여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기회 창출에 힘을 보탰다.

상담 품목은 식품과 뷰티를 비롯해 생활용품, 헬스·바이오, 기계·전자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행사장에는 참가 기업 제품 전시 공간도 마련돼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0만호 기자

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 연수단 전북도 방문... 도, 글로벌 인재교류 확대

우즈베키스탄 중앙·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3명,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등 공유

전북자치도가 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1일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3명이 도청을 찾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과 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지방행정 우수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연수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는 입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체계를 소개하며 지역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을 공유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한 우수 인재 유치 기반을 소개했다. 연수단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와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AI 행정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문서 작성과 정책자료 검색·분석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행정혁신 사례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과 디지털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을 확대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새만금청, 19일까지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유)은 오는 6월 19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새만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마트 수변도시, 육구배수지 산업단지 건축현장 등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건축·토목·품질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수방대책의 적정성, △배수시설 및 절·성토 사면 관리상태, △흙막이·거푸집·동바리·비계 등 가설구조물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0만호 기자

주한 르완다 대사, 새만금사업 현장 방문

한·아프리카재단 상호협력 MOU 후속 교류 일환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11일, 바쿠리무차 은쿠비토 주한르완다 대사와 김영재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사업 현황 소개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한·아프리카재단이 지난해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당시 협약을 통해 새만금과 아프리카 지역 내 기업간 상호 시장 진출 지원 및 주력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인적·물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방문단은 새만금 주요 개발 현황과 투자환경, 산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기업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새만금의 산업·투자 모델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0만호 기자